

 금융위원회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금융감독원
	보도	2017.9.20.(수) 조간	배포	
책 임 자	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 진 창(02-2100-2990)	담 당 자	양 병 권 사무관 (02-2100-2992) 유 원 규 사무관 (02-2100-2983)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김 태 경(02-3145-7550)		이 상 민 팀 장 (02-3145-7552)	
	여신금융협회 상 무 이 태 운(02-2011-0710)		이 효 택 부 장 (02-2011-0724)	

②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 활성화

- (현황)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결제하는 더치페이가 확산됨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누어 결제하려는 수요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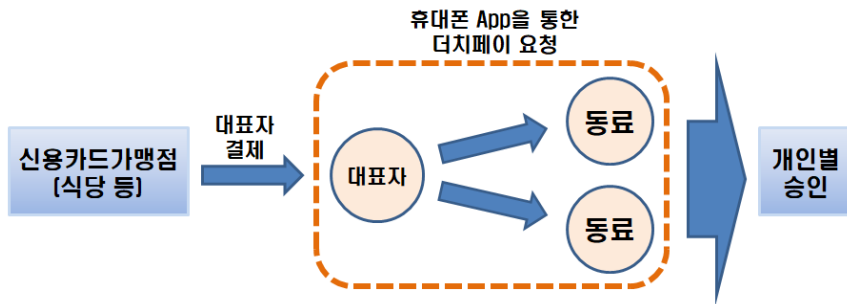
* 단, 현재는 카드결제를 나누어할 경우 결제시간 증가 등 불편이 큰 상황

- (개선)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 허용 :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쏘카드사간 연동방안 마련

⇒ (기대효과) 소비자와 가맹점간의 결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다건 결제 → 1건 결제를 통해 불필요한 결제비용 절감 가능

* 송금방식과 달리 카드결제로 더치페이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 가능



<사례> C카드사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D, E, F는 회사 근처 맛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을 각각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려 함. 종전에는 식당 주인에게 별도로 요청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카드결제를 해야 하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식당 주인도 바쁜 시간에 불편했음. 앞으로 C카드사 더치페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D가 대표로 카드결제를 하고(1회 결제) 이후 D는 E와 F의 개인별 결제금액을 입력하여 App을 통해 더치페이를 요청하게 됨. E와 F는 요청 메시지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App상에서 본인의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할 수 있어 더치페이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됨.

③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이용 원활화

- (현황) 해외 장기 체류자(유학, 근무, 사업 등 약 261만명)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경험

* 현지 은행 계좌개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현지 신용카드 발급에도 제한

** 해외결제가 가능한 국내외겸용카드 이용시 해외이용 수수료(약 1% 수준) + 환전 수수료(현지통화 약 0.95%) 등 발생

- (개선)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기대효과) 해외 장기체류자의 카드발급·이용 및 수수료 절감에 기여하며, 카드사는 고객 유지를 통해 향후 회원모집 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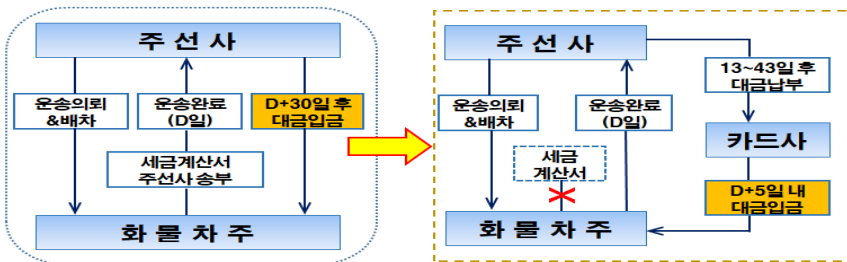
<사례> 해외 장기 출장을 가게 된 G씨는 현지의 은행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함. 기존에는 한국에서의 신용등급을 현지 은행이 확인할 수 없어 발급이 어려웠으며, 해외결제가 가능한 글로벌카드를 이용할 경우 각종 수수료로 약 2%를 부담해야했음. 앞으로는 G씨가 국내에서 이용하는 H카드사가 해외 I은행과 제휴를 맺고 G씨의 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신용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현지 I은행 으로부터 현지인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이용할 수 있게 됨.

4.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 활성화

- (현황)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어 운송 후 대금 수취하기까지 약 30일 소요(운송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음)
- 또한, 매 운송시마다 차주(車主)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어 발송비용과 불편 등 야기
- (개선) 카드사가 ①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②신용카드로 수납해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부수업무) 허용 (금감원 전자고지결제약관 신고수리, '17.10월)

* 전자고지결제업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대금 청구내역을 고지하고 그에 따른 정산·결제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무(전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 (기대효과) 차주는 종전 보다 20~25일 빨리 운송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작성·송부 등 별도 작업 불요



<사례>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J씨는 화물운송 관련 모바일 중개업을 통해 운송건을 접수하고 주선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있음. 기존에는 운송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화물을 운송한 이후 약 30일 가량 뒤에 주선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야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못 받게 되는 일도 있었음. 또 J씨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매번 등기로 보내야해 등기비용이 들고 불편함도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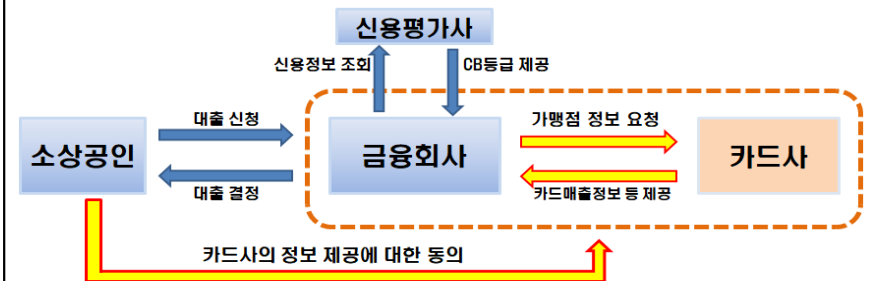
앞으로 K카드사가 화물운송대금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J씨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화물운송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주선사를 선택하여 운송대금을 20일 이상 빨리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카드매출 전표가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대체하게 되어 우편 발송의 부담도 사라짐.

5.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 이용 활성화

- (현황) 카드사는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매출 규모, 영업기간, 매출유형 등 가맹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보유
- (개선)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를 금융기관(예 : 신협)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금감원 부수업무 신고수리, '17.10월)

* 카드사는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 금융기관은 사업자가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실행

⇒ (기대효과)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이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기관은 가맹점의 카드매출정보 등을 여신 심사에 활용하여 신용대출 취급기반을 강화



<사례> L씨는 약 10년 정도 성실하게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 어느 날 낡은 세탁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여 가까운 은행에 가서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에서는 L씨가 별도의 담보가 없고,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거절하였음. L씨는 고금리의 대부업체 대출밖에 받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새로운 장비 도입을 포기함.

이후 M카드사와 신협간 제휴로 M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를 신협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씨는 인근 신협에 대출을 신청함. 신협은 L씨의 동의를 받고 세탁소의 카드매출 관련 정보, 영업기간 정보 등을 카드사로 부터 제공받아 대출 심사를 실시하였고 L씨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 주었음.

L씨는 신협에서 대출받은 1,000만원으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환해 나갈 계획임.

6.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 (현황)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카드사들도 카드결제 과정을 효율화하여 고비용 결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

* 카드결제는 통상 카드사-벤사-가맹점의 구조로 결제되고 있으며, 벤사는 결제 승인·중계, 전표 매입·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벤수수료를 수취

- (개선) ①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②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벤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대형가맹점에 대해 비용절감분을 초과한 과도한 수수료 인하는 리베이트 소지

7.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 ※ 옴부즈만 권고 사항

가. 카드사의 약관 변경시 고객 고지방법 확대

- (현황) 신용카드 약관변경시 현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함
- (개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여 고지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표준약관 개정, '17.12월)

나.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 (현황) 현재는 신용카드 1년 미사용시 휴면카드가 되어 이후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됨
- (개선) 휴면카드의 “거래정지 → 카드해지” 기간을 6개월 연장 (3월 → 9월)하여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 및 소비자 불편 방지 (감독규정 개정, '17.12월)

다. 신용카드사의 고객방어 활동 허용

- (현황) 현재는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 대해 고객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해지 방어 활동이 원천 금지

- (개선)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은 허용 (감독규정 개정, '17.12월)

* 단, 경제적 이익 제공, 해지시 불이익 과장 설명, 해지업무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행위 등 비용을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소비자에 불이익한 사항은 지속 금지

3. 향후 계획

-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안에 완료
-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 (9.20일 규정변경 예고)

- 향후에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